

거리두기 장기화에 방역 위반 속출

제주도, 2만여건 특별 현장점검에서 59건 적발 식당·카페 50건 가장 많아... 31일까지 단속 강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기간이 이달말까지 연장된 가운데 도내에서 방역 수칙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총 2만26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도는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

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1만3272건의 점검 실적 중 59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56건은 행정지도와 3건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 5종은 총 2331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1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목욕장업은 총 58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1건에 대해 고발 명령을 내렸다.

식당·카페는 총 9657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50건에 대한 행정제도 및 1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노래연습장은 총 390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으며, 점검 결과 적발사항은 없었다.

또한 일반관리시설은 83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6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PC방은 총 221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6건의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도 실내체육시설 275건, 교회 130건, 학원 74건, 오락실·멀티방 67건, 상점·마트 34건, 기타 35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집합금지 등이 담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사례의 경우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로 연락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도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난치병학생 지원' 추가 접수

제주도교육청은 이달 29일까지 '2020년 흔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3차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2020년 기 신청자 중 연간 한도액(300만원) 미만 수령자 가운데 추가 신청항목이 있거나 2020년 지원금 신청을 못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암, 심·뇌혈관, 희귀 난치성질환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환 학생이다.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학교를 유예 또는 휴학한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진선희기자](#)



흰죽지의 비상 18일 제주도 환경연 신창리 저수지에서 휴식 중이던 흰죽지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황급히 날아오르고 있다. [강희만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 본격

2월 시작 11월 완료 계획... 저온유통체계·교육 등 과제 도, 우선접종 대상 9개군 이어 2차 대상군(19-49세) 접종

이르면 2월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임시예방접종 추진계획(안) 수립 등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제주도의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2월부터 우선접종 권장대상(9개군)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2차 대상군(19-49세) 접종을 이어가 오는 11월에는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선정은 감염·증증질환 발생 위험, 의료체계 및 기타 사회 기반시설 유지, 취약군에게 전파 위험, 노출위험 등이 기준이 됐다.

우선접종 권장대상(9개군)은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지식 생활자 및 종사자 ▷노인(65세 이상)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 19 1차 대응요원 ▷50-64세 성인 ▷

경찰·소방공무원·군인 ▷교정시설·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이다.

도는 의료기관·복지시설 종사자와 요양병원 등 입소자 등 취약시설 백신접종 우선순위 대상(잠정)자를 약 1만9849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2차 대상군(19-49세)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8만5387명이다. 접종비용은 무료다.

도는 국·공립병원(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과 한라체육관, 강창학경기장(또는 서귀포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접종센터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백신보관

관리와 수용력을 감안해 위탁의료기관을 지정(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중 선정), 1/4분기는 위탁의료기관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원활한 예방 접종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안센, 모더나, 화이자 등 제약사 백신 종류에 따른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체계) 구축과 백신 종류마다 다른 접종법에 대한 철저한 접종교육, 의료인력 확보가 선결 과제로 꼽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열린 올해 첫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비대면 영상회의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지자체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을 요청했다.

제2공항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곧 실시됩니다. 도민여러분의 선택이 제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반대한다
답해주세요

찬성 37.1% 반대 57.9%

**성산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의견은?**

제주MBC 여론조사(2020.09)

제2공항
반대
57.9%

신산리 부녀회

제주시, 한 달간 방역 위반 87건 적발

집합금지 유흥시설 5곳 고발 업소·이용자 26건엔 과태료

제주시는 최근 한달동안 제주형 특별 방역(거리두기 2단계+α) 기간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위생업소 87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5곳을 고발하고, 업소 3곳과 업소 이용자 23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위생관리과 전직원들로 점검반을 편성, 공중·식품 위생업소 9050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집합금지된 5종의 유흥시설과 목욕장업, 음식점의 오후 9시 이후 객석 영업금지 등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된 5종의 유흥시설 중 5곳(유흥주점 3, 단란주점 2)이 적발돼 고발했다. 또 오후 9시

이후 객석영업·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등 56곳(일반음식점 51, 휴게음식점 3곳, 목욕장업 2곳)에 대해 1차 시정조치하고, 2차 이상 위반한 업소 3곳에는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집합금지 시설을 이용하거나 오후 9시 이후 음식점 매장내 취식자(개인) 23명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했다.

제주시는 1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추가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903곳), 홀덤펍(10곳)에 대한 집합금지 연장 안내, 목욕장업(86곳)에는 발한실과 매점 운영금지 등의 방역수칙 안내문을 전달했다. 식당과 카페 등 음식점(1만3089개소) 관련 협회에도 관련 문서를 발송하고, 모든 업소에 문자메시지(SMS) 발송도 마쳤다.

설 앞뒤 임금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난해 임금체불 153억원 체불 청산 기동반 등 운영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대담 10일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임금체불 발생액은 153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3% 감소했다. 임금 체불 청산액은 99억4100만원이며, 미청산액은 60억3900만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측은 분석했다.

이번 집중 지도기간 운영 관련 주요 내용은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게 되며,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 시행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용자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할 계획이다.

또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용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용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황정호 소장은 "우리 지역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